

적폐 청산 '현재진행형'...사회 갈등 확산은 과제로

혁신기, 권력형 적폐 청산 목표...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도약기, 법제화 작업에 주력...생활적폐 청산 과제 선정
적폐 드라이브 가속...사회 갈등 증폭 · 여야 대립 격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사회 집단별 갈등 심각성 인지 중
집권 3년차, '국민 통합' 방점 찍은 리더십 요구 목소리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보혁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범했지만 집권 730일인 현재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 제인 적폐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와 진보 간 대치 국면은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발판 삼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도 무관치 않다. 집권 3년차에도 적폐청산 작업을 이어나가 국정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다.

정권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적폐 청산 로드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혁신기(1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기·2019년~2020년), 안정기(3기·2021년~2022년 5월)로 3단계로 구분된다.

혁신기인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는 권력

형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이 그 시발점이었다. 정치 댓글 작성과 민간인 사찰 등 정치 개입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완전히 해체됐고 국정원의 역할도 대폭 축소됐다.

또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 막강한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해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 부처내 적폐청산TF를 꾸려 권력형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도약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및 탈세 등을 포함한 생활 적폐 청산 8대 과제를 선정해 변함없는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갔다.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던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쟁한 적폐청산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 '연내 법제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당정이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폐 청산의 드라이브를 가속화 할수록 이와 생각을 달리하는 각계각층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고민이다. 적폐 수사가 본격화되고 개혁의 색채가 뚜렷해질수록 그 반작용으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립각이 거센다는 것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인 52.4%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대비 29.3%p 증가한 수치다. 줄었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사회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

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한 것도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역 대결을 넘어 사회 갈등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사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꼽히고 있고 남녀 갈등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졌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탄생한 신조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적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

야 하지 않겠나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열의든지 협력하고 터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비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적폐청산 기조 속 아념 갈등 양상은 더욱 국심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아념 대결 양상이 국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폐청산 기조 속 반작용으로 앞으로 반대편 세력이 어떻게 저항하느냐가 대통령의 평가와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집권 3년 차에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 정책 추진을 두고 진영 대립은 불가피하다. 다만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실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저조했다. 지난해 대비 20.5%p 증가한 47.1%가 갈등 해소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 대비 20.5%p 감소한 52.9%로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커다.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고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2018년 7월 3주차엔 67%였다. 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8월 1주차는 60%,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가 있던 8월 4주차는 56%로 내려앉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됐던 7월 3주차엔 67%였다. 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8월 1주차는 60%,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가 있던 8월 4주차는 56%로 내려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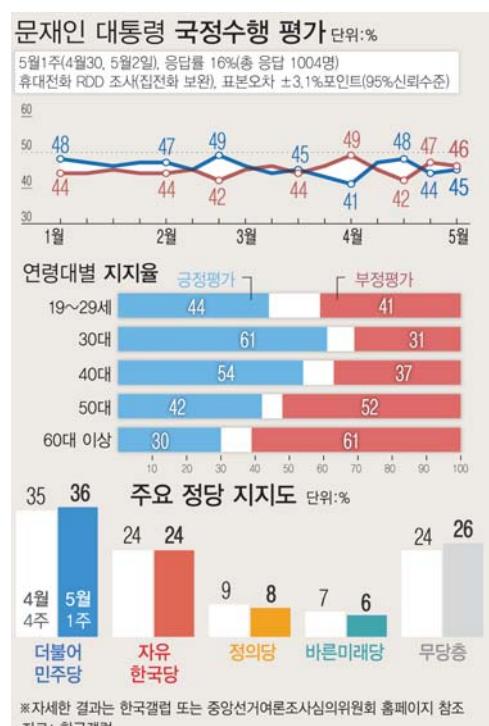
내년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p 이내로 줄기까지 했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미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붕괴된 것이다.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진 9월 1주차는 49%로 최저점을 찍었다. 출범 후 무려 35%p가 시기되었다.

물론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12월부터 다시 하락해 긍·부정률 모두 40% 대인 상태가 5개월째 되어들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5%로 집계됐다. 40% 대에서 미세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

지지율로 보는 문 정부 2년...하락했지만 높은 수치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경제와 민생 문제로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세한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40%대 상태를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를 견인 요인은 복합적이다.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선 다른 변수가 뛰어나왔다. 지난해 6월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9월 50%선 통과 '최저점'

취임 2주년,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커...부정평가 62%

지방선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일자리·민생 문제였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 지지율 84%에서 출발해 취임 1년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훈풍'에 지지율을 고공행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취임 1년 차(지난해

5월 1주차) 주간 집계 지지율은 83%였다. 새 정부 하니문 효과도 톡톡히 역할을 했을뿐더러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큰 몫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교안보 성과로 역대 정권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취임 1년 국정 지지도는 제13~19대 대통령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였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1년 국정 지지도는 45%, 14대 김영삼 대통령은 55%,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60%,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25%,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34%,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6%였다.

그러나 성과가 필요한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의 훈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아권이 경제 실정 부각에 종종동세를 펼치면서 민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됐던 7월 3주차엔 67%였다. 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8월 1주차는 60%,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가 있던 8월 4주차는 56%로 내려앉았다.

내년 9월 초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차이가 10%p 이내로 줄기까지 했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미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붕괴된 것이다.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진 9월 1주차는 49%로 최저점을 찍었다. 출범 후 무려 35%p가 시기되었다.

물론 9월 중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12월부터 다시 하락해 긍·부정률 모두 40% 대인 상태가 5개월째 되어들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5%로 집계됐다. 40% 대에서 미세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